

“전주올림픽 유치 반드시 이뤄내자”

전주시,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범시민 지원위원회 발대식 가져… 유치 염원 시민 열망·의지 다져

2036년 전주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전주시민들의 열망이 하나로 모여졌다.

전주시는 25일 오후 2시,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올림픽 유치를 향한 전주시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2036 전주올림픽 유치 범시민 지원위원회'의 발대식을 가졌다.

올림픽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고,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주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발대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 김정기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4인의 공동위원장과 위원, 시민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주시합창단의 축하공연 △올림픽 홍보영상 상영 △위원 위촉장 수여 △'우리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할 수 있다' 주제 발표 △올림픽 유치 기원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우범기 시장은 '우리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할 수 있다'를 주제로 직접 발표자로 나섰다.

우 시장은 전주가 가진 문화·체육적 역량과 올림픽 유치를 통해 기대되는 지역 발전 비전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참석한 시민들은 '시민 중심 올림픽' 실현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이날 공식 출범한 '2036 전주올림픽 유치 범시민 지원위원회'는 △공동위원장 △고문 △자문위원



전주시는 25일 오후 2시,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올림픽 유치를 향한 전주시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2036 전주올림픽 유치 범시민 지원위원회'의 발대식을 가졌다.

회 △부위원장 △지원조정위원회 △6개 분과위원회(체육진흥, 청년·홍보, 시민참여, 복지환경, 문화관광, 경제산업)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위원들은 정치와 교육, 체육, 문화, 언론, 경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꾸려졌으며, 올림픽 유치 전략 자료와 시민 중심 월드컵 유치 불조성을 위한 활동을 선도에 나가기게 된다.

지원위원회의 활동 시기는 위촉장이 수여된 이날부터 개최지 선정이 이뤄지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까지다.

시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9월부터는 올림픽 유치에 대한 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범시민 결의대회 △범시민 서명운동 △각 단체별 자체 캠페인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이후 국내외 체육 관련 기관·단체들을 상대로 활발한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다양한 국제스포츠기구 관계자들과 활발히 교류하기도 했다.

또 싱가포르 출장을 통해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 현장을 직접 경험한 것 뿐만 아니라, 국제 수영계 핵심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전주가 국제 스포츠도시로 도약을 앞당기기도 했다.

이외에도 시는 전주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높이기 위해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단오, 전주비보이그라프티 등 전주에서 열린 주요 행사와 연계한 올림픽 유치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며 올림픽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우범기 시장은 "이번 발대식은 올림픽 유치를 향한 시민의 뜻과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귀중한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올림픽 유치 활동을 통해 반드시 올림픽을 전주로 유치해서 전주의 큰 꿈과 위대한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전주시가 전주에 살고 있는 내외국인의 수와 그들이 살고 있는 주택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전주조사에 나선다.

시는 오는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28일 동안 '통계법'에 따라 5년마다 지역에 상주하는 내·외국인의 거처를 확인해 인구와 가구, 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는 인터넷 및 전화조사와 방문 면접조사의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조사 첫날인 오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은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인터넷 및 전

화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7일까지 방문 면접조사 업무를 담당할 조사요원 342명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인구주택총조사에 관심이 있고 통계조사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에 따라 완산·덕진구청 행정지원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25일 오전 완산구 선너머네거리와 덕진구 진북광장사거리 일원에서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거리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주시,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 나서

전주시는 25일 오전 완산구 선너머네거리와 덕진구 진북광장사거리 일원에서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시민들에게 납부 기한을 널리 알리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거리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시청 세정과와 완산구·덕진구 세무과 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라는 구

호와 함께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또한 시는 시민들이 금융기관을 직접 찾지 않고도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한 다양한 납부 수단을 안내하는 한편, 오는 9월 1일 납기 이후에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기도 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특별 체납 징수 펼친다

전주시가 특별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37일 동안 총 114억원(지방세 88억원, 세외수입 26억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모든 세입부서에서는 징수 활동을 강화해 지난해와 올해 체납분에 대한 납부촉탁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상시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담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자의 사업장이나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납부를 독려하고, 필요할 경우 압류와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지방소멸 위기 대응 거점도시 지원 집중해야”

전주시정연구원, 'JJRI 이슈브리프 제9호' 발간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 거점도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은 거점도시 집중 지원의 필요성과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거점도시 집중 지원 방향과 재정지원 확대 방안 등을 제안한 'JJRI 이슈브리프 제9호'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번 'JJRI 이슈브리프 제9호'를 통해 '거점도시 집중 지원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거점도시 집중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집중 지원 방향을 도출했다.

거점도시 집중 지원 방안으로 △지역별 거점도시 선정 및 지원근거 확보(안) △거점도시의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안) △중양정부의 거점도시 대상 이전기업 및 이주민 직접 지원(안)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연구원은 지방거점 역할을 수행 중인 전주시와 청주시, 춘천시 등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특수성과 경제활동인구 중 청년인구 취업자율과 고령화 추세,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누적 지가지수 등을 통해 구조적 어려움을 확인했다. 또 영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미국 등의 기존 거점도

시 지원 사례를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저성장지역이 아닌 지역 거점도시 집중 투자 필요 △인구뿐만 아니라 도시 기능 등을 고려한 종합적(거점도시) 지정 기준 필요 △거점도시와 주변지역 간 연계 강화 △거점도시간의 경쟁력 제고 필요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거점도시 집중 지원 방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거점도시 요건 및 지원근거 구체화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개정 등을 통해 거점도시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제안 △중양정부의 거점도시 대상 이전기업 및 이주민 직접 지원방안 등을 제안했다. /권희성 기자

24개 국가 공무원들, 전주 찾아 우수정책 배워

24개 국가의 공무원들이 전주를 찾아 우수정책을 배웠다. 전주시는 25일 인도네시아 등 24개국 총 3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립대 해외 우수생들이 우수정책을 배우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외교부와 코이카가 지원 하는 개도국공무원 역량강화 석사학위 프로그램으로 초청받은 우수생들의 우수정책 공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시립대에서 제안된 행사였다.

이들 우수생들은 전주시의 도시개발과 관광정책 방향을 청취하고, 한옥마을과 경기전을 둘러보며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도시재생 방향 등을

모색했다. 시는 전주를 찾은 우수생들에게 전주의 우수한 정책과 관광 인프라 등을 소개하고, 하계월드컵 유치를 위한 홍보에 임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의 도시와 인프라 개발 경험을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전주시의 우수한 정책을 개도국에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시는 이번 해외우수생들의 전주 방문이 국제도시 위상과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도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지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